

특집  
논문

## 학생운동 세력의 도심 시위 전술과 경찰의 진압 작전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이준영 \_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논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학생운동 세력의 도심 시위 전술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 진압 작전의 변화상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5·16쿠데타 이래 도심 공간은 군사 정권의 물리적 폭력이 관철되는 '지배의 공간'이었다. 1980년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가두시위는 권력이 강제하는 금기에 도전하는 행위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빈발한 가두시위는 공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고, 내용적으로도 급진화·체제화되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1980년대 이래의 시위 경험, 특히 6월 항쟁기의 경험을 통해 대규모화·조직화된 도심 시위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집회·시위에 대한 당국의 대응도 달라졌다. 1980년대 후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자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한편,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도심 시위를 진압해야 했던 당국은 제도적으로 공안체제를 정비하고, 물리적

\* 이 글은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1991년 열사투쟁과 한국민주주의'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날카롭고 꼼꼼한 심사평으로 부족한 원고가 논문의 형식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으로는 시위에 대응하는 진압경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가두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대공·정보경찰과 경비경찰이 확충되었으며, 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이 대폭 증가하고 진압 장비가 현대화되었다.

그 결과 거리에서 발생한 시위대와 진압경찰의 충돌은 점차 격화되었으며, 그 필연적인 귀결로서 1991년 '5월 투쟁'의 비극이 배태될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시위의 빈발과 시위 대오의 조직화·무장화, 그리고 경찰 진압 장비 확충과 진압 전술의 공격적 운용이라는 순환 구조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 바로 1991년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식 진압 장비와 '백골단'으로 무장한 데다 공격적인 진압 교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경찰은 국가폭력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 **주요어:** 학생운동, 도심 시위, 경찰 진압 작전, 1991년 '5월 투쟁', 김귀정

## 1. 머리말

한국현대사에서 집회와 시위는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해 왔다.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는 정권을 수차례나 바꿔놓았을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훗날 역사에 기억될 만한 '승리한 시위' 혹은 '대중화에 성공한 집회'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한 시위'와 '막대한 희생을 치른 집회'가 존재했다.

집회나 시위가 확산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제도화된 국가폭력 때문이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누른 권위주의 정권은 민중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법적·제도적 억압기구와 더불어 물리적 억

압기구를 이용해 탄압해 왔다.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검찰 등이 법적·제도적 억압기구였다면, 군과 경찰은 집회·시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군중을 해산시키는 물리적 억압기구였다.

물리적 억압기구로서 경찰은 박정희 정권기 위수령·계엄령 등으로 빈번하게 호출되던 군을 대신하여 1980년대 거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역할을 전담해 왔다. 경찰은 유신체제하에서는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직·간접적 지휘를 받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 이래 대공수사 및 경비(집회·시위 관리)에서 독자성을 띠며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경찰은 중정-안기부 및 군 내 방첩기관, 검찰 등과 함께 공안기구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오랫동안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억눌러 왔다.

집회와 시위를 주도·기획하는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는 경찰의 물리적 탄압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고안해 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학생과 재야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시민사회의 발달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연·지연 등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집회와 시위를 조직했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정서적 공감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재야 세력이 벌인 시위는 삼시간에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민주화운동이 조직적으로 성장하고 대중화·급진화 경향이 동시에 진전되면서 집회와 시위의 전략 전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1980년대 이래의 시위 경험, 특히 6월 항쟁기의 경

힘을 통해 대규모화·조직화된 도심 시위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자 집회·시위에 대한 당국의 대응도 달라졌다. 1980년대 후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자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한편,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그 결과 거리에서 발생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점차 격화되었으며, 그것이 정점에 달했던 시점이 바로 1991년이었다.

도심 시위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도심의 광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도심과 광장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 규명되었으며, 정치화된 공간으로서 도심·광장이 갖는 공간사회학적 특성이 주목되었다. 김백영은 도심 공간에 부여된 담론적 의미와 상징, 그리고 시민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공간으로서 도심과 광장에 초점을 맞춘다(김백영 2003; 김백영 2013). 그는 4월혁명 이래 과잉 정치화된 도심부 광장의 지배적 장소성을 두고 벌어진 대립구도를 설정하는데, 정치화된 장소성을 ‘소거’하려는 지배 세력의 의도와 그것을 다시 ‘환기’하려는 저항운동 세력 사이의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공간성’과 저항 세력의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배 세력과 저항 세력이 길항하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며 변모해 간 도심 시위와 진압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한국경찰의 현대적 집회·시위 해산 작전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래 미국의 대한경찰원조 연구와 궤를 같이하여 발전해 왔다. 권혁은 미국의 대한경찰원조가 1960년대 경찰의 공안기관으로서의 능력이 급성장하는 배경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 경찰은 미국의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교리의 영향 아래 대간첩작전 수행 능력을 배가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화된 경찰력은 도심 시위 진압에서도 이전과 비할 바 없는 압도적 물리력을 갖추게 되었다(권혁은 2020). 김소진은 미국의 대한경찰원조가 한국 경찰 조직의 변화와 치안업무 재편에 미친 영향에 보다 집중했다. 이 시기 경찰기동대 등 경찰 기구의 신설과 재편은 북한 공작원의 침투와 활동을 예방하는 동시에 도심 시위 진압이라는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김소진 2020). 최근 권혁은의 후속 연구는 5·18항쟁기 시위진압 전술의 기원을 1960년대 이래 미국의 냉전 전략의 일환인 대반란전에 있다고 보면서, 1960년대 인권의 개념이 개입하여 변화한 미국 국내 진압 전술의 ‘현대화’ 경향과 달리, 군부독재가 지배한 한국에서는 과격 진압이 체질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권혁은 2021).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한국 경찰의 형성 초기, 시위 진압 전술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즉, 한국 경찰의 시위 진압 전술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중 미국의 대한경찰원조에 주로 집중하여 1980년대 이래 한국적인 시위 양상에 조용하는 경찰 진압 전술의 특수성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이 글은 위에서 검토한 연구사의 경향을 염두에 두고 도심이라는 공간 속에서 벌어진 학생운동 세력의 시위 전술과 경찰의 진압 작전 사이의 길항과 상호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생운동 세력과 경찰은 도심 공간에서 벌어진 시위-진압의 가장 중요한 두 행위자였다. 이들은 공방을 주고받는 적대 관계였으나, 쌍방 대립의 과정에서 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는 도심 시위는 주로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회·시위로 그 범위를 한정할 것이다. 이는 학생과 경찰 모두 서울에서의 도심 시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상식적인 이유 때문이기

도 하지만, 1980~1990년대 도심 시위의 지역적 상황에 관한 연구가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자료로는 먼저, 시위의 양상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당대의 신문·잡지 기사와 경찰 측에서 발행한 공간자료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1991년 ‘5월 투쟁’ 당시 도심의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서울특별시경찰국에서 생산한 “5.25 종합대책”과 진압 현장의 일선 경찰이 작성한 “상황일지” 및 재판기록 등을 활용하여 당시 거리의 상황을 경찰 진압 작전의 시각에서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sup>1)</sup>

## 2. 학생운동 세력의 도심 시위 전술

### 1)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1970년대 후반 긴급조치 9호 시기 학생운동은 폭압적인 유신체제에 맞

- 
- 1) 이 문건들은 19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고 김귀정 열사의 재판 과정에서 피고(경찰) 측이 원고 측 변호인에 제출한 것을 필자가 입수한 것이다. “5.25 종합대책”에는 행사 개요, 관련 동향, 전망, 정보대책, 경비대책, 수사대책, 지원대책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분량은 28페이지이다. “상황일지”는 동국대 및 퇴계로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 경비계, 도심 가두 빈발지역 경비를 담당했던 서울 성북경찰서 경비과, 대학로 행사장 인근 경비를 담당했던 제4기동대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김귀정 사망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이다.

서 점차 정예화된 형태의 비밀결사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 세력은 새로운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고 체계적·조직적인 형태의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표출했다. 이들은 점차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도 갖추어가며 시위 조직에 나섰다. 시위는 주로 교내에서 벌어졌지만, ‘5분 시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술이 고안되었으며 대학 간 연합 시위도 기획된 바 있었다(신동호 2013).

언더서클에 기반을 둔 유신체제하 학생운동의 기습 시위방식은 1980년대 상반기까지 지속되었지만, 5·18 광주 민주항쟁 이후 운동이 급속도로 고양되면서 그 동원체계가 보다 조직화되고 대중화되었다(허은 2013, 160). 학내에서의 시위도 이전보다 빈번해졌으며, 교내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도 자주 발생했다. 학내 집회는 인근의 가두시위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거리에서 벌어진 시위는 대부분 수백에서 1,000명 내외의 소규모로 이루어졌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189, 194, 198, 207, 208). 1983년 연말부터 조성된 이른바 ‘유화국면’ 이후에는 학생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학내에서의 집회에 이어지는 가두시위가 일상화되었다. 이 시기 가두시위의 또 다른 특징은 급진적 노동운동가들과 학생운동 세력이 ‘생산지역 기층 민중 속에서의 정치투쟁’을 기치로 내걸고 노동자 밀집지역이나 서민 주거지역에서 연대투쟁을 벌였다는 점이다(민차산 1988, 173). 이들은 이슈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를 꾀하기 위해 신림동·신길동·가리봉동·대림동·목동·사당동·경동시장·미아삼거리·동대문시장 등과 같은 공단·시장지역 및 빈민주택가 등에서 연대투쟁을 벌였다(김백영 2003, 365).

1985년 무렵이 되면 시위는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1985년 4월 전학련이 주최한 4·19 기념식에 참여한 여러 대학 학생 7,000여 명이 기념식 후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으며, 각 학교가 지역별로 분담하여 이날 저녁 늦게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5월에는 전국적으로 광주학살 원흉 처단 투쟁이 전개되어 교내 시위-가두 진출 시도-경찰과 공방전-교내 농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쟁 과정이 정착되었고, 투쟁 규모와 횡수도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237, 238).

주요 권력기관이나 상징적인 건물에 대한 타격 및 점거 투쟁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sup>2)</sup> 학생운동이 점차 이념화·급진화됨에 따라 이념적·실천적으로 훈련된 소수의 전위대가 공권력의 거점이나 권력기관, 혹은 억압을 상징하는 공간을 타격하거나 점거하는 방식의 시위 방식이 확산되었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공권력의 폭력과 구속 및 상당한 기간의 수형 생활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위 ‘자살조’가 되어 기습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타격 대상이 된 건물을 화염병 등으로 불태우거나, 점거 후 입구를 봉쇄하고 창문 밖으로 플래카드를 내

---

2) 1985년 5월 23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에 소속된 5월투쟁 각 대학 투쟁위원회 학생 73명이 미문화원 점거농성을 결행했다. 같은 해 11월 4일에는 고려대생 30명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점거했고, 다른 한 편에서는 전학련 소속 학생들이 미국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를 점거했다. 또한 12일에는 전학련 산하 삼민헌법쟁취투쟁위원회 소속 학생 25명이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를 기습 점거했으며, 18일에는 같은 전학련 산하 ‘군부독재타도 및 파쇼헌법철폐 투쟁위원회’ 학생들 191명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기습 점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239, 250, 251, 254).



걸고 유인물을 뿌리며 구호를 외치는 방식의 시위를 전개했다.

대학가 주변의 경찰서나 파출소는 권력의 대리기관 혹은 집회·시위 현장의 폭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돌멩이 혹은 화염병 투척의 목표물이 되었다.<sup>3)</sup> 제국주의적 억압을 상징하는 미문화원, 군사독재의 정치적 수뇌기관으로 여겨진 민정당사 등도 학생들에 의해 점거되어 대중의 이목을 끄는 공간이 되곤 했다. 한편 1986년 10·26 건국대 사건과 같이 오히려 지배 권력의 능동적인 탄압 공세로 인해 점거 농성이 유발되는 경우(김백영 2003, 365, 366)나, 신민당 등 야당 당사가 그 보수성을 규탄하는 학생들에 의해 점거되는 사례도 있었다(조선일보 1991/05/08 1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학생운동 세력이 결행한 시위는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 지배 세력의 권력을 상징하는 ‘지배의 공간’으로서 도심의 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도전적인 행위였다. 소규모 교내시위에서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기습 점거 시위, 그리고 조직화된 가두시위에 이르기까지 이 시기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도심 시위는 그 자체로 권력이 강제하는 금기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했다. 가두시위는 도시의 치안 질서

3) 1991년 2월 8일 고려대 학생들은 중앙경찰서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전소시키고, ‘민생파탄 민주압살 노태우 정권 타도’, ‘결프전 파병 반대’와 ‘수서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을 이른바 ‘삼양동 파출소 사건’으로 불렀다. 이후 치안본부장은 파출소 타격과 시위 도중 화염병 투척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화염병 시위 관련자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과 협의하지 않은 법리상 무리가 있는 발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 383; 한겨레신문 1991/02/20).

에 공백을 야기하고, 그 공간 질서를 진공 상태로 만듦으로서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 일시적으로 정치적 지배 질서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실천이었다.

## 2) 1987년 6월항쟁 이후 도심 시위 전술의 조직화

다수의 시민이 합세하는 대중적 가두시위가 일상화된 것은 1987년 6월 항쟁의 대중투쟁 경험에 힘입어 운동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이후였다.<sup>4)</sup> 학생운동은 1987년 5월 초 서울을 동·서·남·북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 대표자협의회 발족식을 가진 뒤, 5월 8일에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를 결성하고, 8월 19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발족했다. 전대협 중앙집행국은 사무국·선전국·편집국·연대사업국·투쟁국·문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투쟁국은 각 지역·지구의 투쟁국장들이 모이는 투쟁국 전국회의를 주관했다(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91, 241; 이창연 2013, 219, 220).

전대협은 회원 수 100만 명, 간부 4만 명, 핵심 간부 1만 명, 총예산 연 50억 원, 참가단위 180여 개 대학, 그리고 상시전투력 2개 사단이라는 말

---

4) 물론 1980년대 거리 시위에 조직화된 학생 혹은 '민중'이나 '시민'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밥풀떼기'라고 불렸던 비조직적 대중이나 도시 하층민들은 대규모 인파가 몰린 가두시위 현장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조직화된 엘리트인 가두시위 주류 그룹은 이들을 위험인자나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했다(김원 2011, 257~259).

이 있을 정도로 대규모 조직을 운용했다(이창언 2013, 223). 이처럼 대규모 화·조직화된 학생운동 진영의 투쟁 전술은 정세와 사안에 따라 폭력·비폭력 시위로 적절하게 배분되었다. 학생들은 화염병과 ‘짱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대항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정당한 정치적 요구를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사수대’라는 이름의 전투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 사수대는 각 대학별로 별도의 체계와 규율을 갖춘 준군사적 형태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대학별 사수대는 상황에 따라 연합하여 사안별 ‘결사대’·‘체포조’·‘선봉대’ 등을 구성하기도 했다(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8/11).

1988년 5월 13일한 발족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연합체’ 또는 ‘협의회’였던 서대협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력으로 서울 시내 가두시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보다 조직적인 학생운동 체계 아래서 서총련-각 지구총련 단위의 전술지침이 전달되고, 이는 다시 각 대학-각 단과대학-각 학과로 이어지는 학생회 시스템을 통해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전해졌다.5) 조직화된 학생운동의 집회·시위 전술은 다변화하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 경찰이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장소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다

학생운동이 주도하는 도심 시위 전술도 다수의 조직화된 대중이 동원되

---

5) 전달 과정에서 보안 미숙으로 ‘택’이 사전에 유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대개 제2, 제3의 ‘택’이 준비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제1차가 15시 종로 3가, 제2차가 16시 30분 을지로 1가, 제3차가 19시 신촌로터리, 정리집회는 연세대에서” 등의 식이었다(김백영 2003, 367).

는 준전투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sup>6)</sup> 시위 장소 역시 서울역-종로-을지로로 이어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하여 신촌·영등포·청량리 등 부도심 권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습적인 가두시위 장소는 시위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선정되었는데, 물리적 지형(접근로 및 퇴각로의 확보), 주변 환경(유동 인구 및 정착 인구의 규모 및 성격), 주체 역량(특히 학생운동의 조직력 및 동원력), 공권력 배치 상황, 객관적 정세, 장소의 상징성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김백영 2003, 371). 지도부는 시위를 계획할 때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소를 선정했다. 장소가 선정되면 '정찰조'를 파견하여 시위 장소 인근에 경찰력이 배치되었는지 등의 보안 상황을 확인하고 전술지침을 확정하여 각급 조직에 전달했다.

도심에서의 기습적 시위가 빈번해지면서, 도심 시위 장소도 공간적으로 일정한 정형성을 띠게 되었다. 직업적 운동가들로 구성된 시위 지도부는 오랜 경험을 통해 적합한 시위 장소를 결정했는데, 경찰의 대응 강도나 경

---

6) 이 과정에서 시위 전술과 관련된 다양한 은어들이 탄생했다. 은어들은 경찰이나 안기부의 도청 혹은 캠퍼스나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학생·노동자들을 감시하던 '기관원'들로부터 '보안'을 지키기 위해 은어를 고안했다.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잡았다. 이른바 '택'(tactics, 전술)은 1980년대 학생들이 즐겨 쓴 대표적인 은어 가운데 하나로 시위장소나 지침 등을 이르는 용어였다. 대다수의 비무장 시위참가자들을 사수·호위하는 소수의 무장조원들은 '전투조(C.C: Combat Cell)'라 불리기도 했다. 이들의 무기가 된 것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그리고 '짱돌'로서, 방어 장비가 없었으므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팸(Family)'은 언더서클 중심의 학생운동 체계 속에서 정파별 비합법 지하조직에 기반한 소규모 모임을 뜻했다. 이외에도 '꼴(class: 계급)', '스트(struggle: 투쟁)', '에네미(enemy: 전경)', '오(organization: 조직)' 등의 은어도 사용되었다(김백영, 2003, 363, 367).

찰 병력 배치 상황 등 여러 정보들을 고려한 뒤 선정되는 시위 예상 장소 후보군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경찰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용한 경찰병력 역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시위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양측 수뇌부 사이의 ‘수읽기’에 달려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지도부는 시위가 소규모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시위 발발 지점으로부터 공권력 투입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고, 대규모 연대투쟁에 의해 압도적인 수의 우위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공권력의 대응태세(진압 작전의 양상)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김백영 2003, 371).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 세력이 주도한 가두시위는 6월 항쟁 이래 확산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통일·노동·광주항쟁·5공비리 척결·빈민 등 다양한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전개되었다. 1988년의 경우 전대협, 서총련, 서울지역대학생총연합건설추진위원회(서건추), 반민정당 총선투쟁연합(총투련) 등 각 학생운동 세력이 벌인 주요 시위만 해도 한 해 107건 이상이었다.<sup>7)</sup> 이러한 연합시위 이외에 각 학교별, 제 정파별로 각각 전개한 활동까지 포함할 경우 1980년대 후반 서울 시내와 대학가에서는 거의 매일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한 집회·시위의 발생 빈도 증가와 전술적 발전에 대응하여 노태우 정권은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함으

7)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의 부록인 “88년 학생운동 투쟁일지”에 기재된 주요 학생 시위의 건수이다(조지훈 1989, 258~264).

로써 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집권세력의 반격은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정점을 이루는 듯했다. 3당 합당의 결과 여소야대의 4당 체제가 해체되면서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개헌선을 상회하는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3당 합당 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조합법 관련 법안 폐기, 군 조직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금융실명제 유보, 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을 통해 1987년 이후 열린 정치공간을 축소하고 민주적 과제들을 변형하거나 유보시켰다(김정한 1998, 41).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적으로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대중적 동원능력을 갖추게 된 사회운동 세력과 노태우 정권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 3. 1980년대 후반 공안체제와 경찰의 시위 진압 전술 변화

#### 1)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경찰의 동향

1980년대 이래 권위주의 정권은 제도화된 국가폭력의 수행 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해 왔다. 당국은 이념화·조직화 경향을 띠어 가는 사회운동 세력에 대하여 안기부·검찰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이나 집회와 시위와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어 그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자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전반적으로 급진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증<sup>8)</sup>했는데, 이는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을 탄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도심 시위 현장의 물리적 억압기구를 대표하는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선언하고, 시위를 관리할 수 있는 물리력을 확충해 나갔다. 이 시기 경찰의 시위 대응 양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이었다. 보다 직접적인 사건은 1989년 5월 3일 동의대에서 진압 경찰 8명이 화재로 사망한 것이었다. 동의대 사건 이후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특히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서울시경은 1990년 10월 17일 ‘대범죄전쟁선포에 따른 실천계획’이라는 제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계획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법·폭력 집단 시위에 대해 국가보위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 국기를 수호하고 사회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주요 시설과 경찰관서 기습의 경우에는 ‘과감한 무기 사용’도 불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서울시경은 거리 시위 등의 경우 이제까지의 ‘공격형 진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검거 위주의 포위 진압’ 작전을 펴고, 대학생들의 교문 진출과 도로 점거 시위 등을 막지 못하는 지휘관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경찰이 말하는 ‘공격형 진압’은 시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진압 전열을 갖춘 뒤에 해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격전 방식에 가까웠다. 즉,

8) <표 1> 1980년대 국가보안법 기소 인원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계
기소인원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535

(법원행정처, 1981~1993;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3, 31 재인용)

기습 시위가 발생하는 곳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동대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진압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검거 위주의 포위 진압’이란 사복체포조인 백골단 등을 이용해 시위 주동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서 나아가 시위대 주위를 신속하게 포위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일망타진식으로 검거하겠다는 의미였다. 또한 서울시경은 상습 시위와 시위 예고 장소에 경찰력을 먼저 투입, 시위 장소를 점거해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화염병 투척자는 교내까지 들어가 최대한 검거하고 화염병 제조·보관장소를 수시로 압수수색하여 모두 회수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한겨레신문 1990/10/18). 이는 1989년 5월 28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것의 연장이었다.<sup>9)</sup>

## 2) 1980년대 후반 시위 진압 경찰력의 강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경찰력의 강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경찰 중심의 대공라인을 새롭게 편성하여 확충하고, 기존 정보 기구를 강화해 나갔다. 이는 시위를 조직하는 학생운동 및 재야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제5공화국 시기 경찰의 대공업무는 1981년 6월 대공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경찰 부서로서 치안본부 제4부가 설치됨으로서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대공업무는 ‘정보’ 업무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와 “대공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대공에 관한 첩보수집 및 분석, 간첩 및 사

9) 국가법령정보센터. 1989/07/07.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회안전사범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지도” 등 본격적인 대공업무에 대한 기획 및 첩보수집,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찰 대공부서 확대의 정점을 이룬 시기가 바로 1986년이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경찰의 정보·대공(보안) 기능은 여전히 안기부나 검찰의 지휘 아래 놓여 있었으나 노사분규 및 위장취업자 단속, 간첩 및 정보사범 검거(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등의 특정 부문에서는 점차 그 독자적인 성격을 강화해 갔다.

둘째,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수사 및 경비기능을 강화했다. 1987년 이후 수만 명 이상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급증하면서, 1989년 2월 14일에는 시위관련사범 주관부서를 대공과에서 수사과로 이관하여 수사2계를 신설하고 기존의 수사계는 수사1계로 개칭하였다. 같은 해 8월 7일에는 기동대와 교통과 증설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허남오 2011, 257). 도심 현장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경찰의 기능도 크게 강화되었다. 1991년 5월 당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비경찰 업무의 경우, 내무부 직제에 따라 치안본부 경비부 경비과·작전과, 정보1부 3과·정보2부 4·5과 등에 편제되어 있었다. 경비과는 경비계획 및 지도, 경찰기동대 운영의 지도·감독 등을 담당했고, 작전과는 경찰작전 및 경찰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전투경찰대의 운영 지도, 중요 시설의 방호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정보1부의 정보3과는 경제·사회 분야, 정보2부의 정보4·5과는 학원·종교/문화계에 대한 정보 수집을 담당했다.<sup>10)</sup> 또한 정보과 형사는 시

10) 국가법령정보센터. 1991/04/23.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 현장에서 사복경찰로 투입되어 주요 거점과 길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즉, 이 시기 경찰의 시위 진압은 경비과의 총괄 아래 작전과의 사전 계획 수립과 정보과의 현장정보 활동 등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시위 진압 경찰력을 대거 확충했다. 1987년 이후 수만 명 이상이 집결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빈번해지면서 시위 진압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을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7년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할 경우 경찰병력이 각지에 분산되어 집회에 참여한 군중 앞에 무력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 진압에 동원할 수 있는 경찰병력을 늘리고자 했다.<sup>11)</sup> 실제로 경찰 내부 통계를 보면 시위진압 경찰력은 6월 항쟁을 전후로 하여 점진적으로 늘어났다.<sup>12)</sup>

11) 경찰은 1990년 시위진압 경찰을 1월 현재 357개 중대에서 8,000여 명을 늘린 431개 중대 60,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의경 1,830명이 추가 충원되어 시위진압기동대 10개 중대를 새로 창설, 각종 시위에 대응하도록 했다(한겨레신문 1990/01/17).

12) <표 2> 기동대 및 사복기동대(경찰직원) 현황 \*중대 수(인원수)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기동대	64 (11,712)	64 (11,712)	64 (11,712)	76 (13,908)	78 (14,274)	83 (15,129)	82 (14,966)	97 (17,711)	107 (17,711)	-
사복 기동대	-	-	-	-	12 (1,956)	17 (2,771)	17 (2,771)	17 (2,771)	17 (2,771)	17 (2,771)
작전전경	(39,706)	(28,847)	(31,139)	(24,463)	(28,345)	(33,829)	(33,829)	(24,908)	(20,176)	(17,982)
의무경찰	-	(17,091)	(21,152)	(24,680)	(24,680)	(24,849)	(24,849)	(28,050)	(34,472)	(37,345)

(경찰통계연보, 1993, 262, 263, 268. \*\*경찰통계연보의 수치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치

넷째, 시위 진압 장비를 현대화하고 사용량을 대폭 늘렸다. 1980년대 초 최루탄에만 의존했던 경찰의 시위진압 장비는 1991년 현재 물대포, M-16소총, 38구경 권총, 쇠파이프, 각목, 돌 등 10여 가지가 넘게 발전을 거듭해 왔다(한겨레신문 1991/05/02). 이 중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최루탄의 남용이었다. 1990년 5월 치안본부가 작성한 ‘화확탄 확보 및 수급계획’에 따르면 1990년 5개월 동안 사용된 각종 최루탄 개수가, 1989년 같은 기간 동안 사용된 최루탄보다 42%나 더 늘었다. 최루탄 사용이 늘어나 수급이 부족해지자, 경찰은 군으로부터 다연발최루탄 1천 세트, KM-25최루탄 10만 발, 최루가스 분말 4,500kg을 차용해 오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90/05/31). 이에 따라 치안본부가 1990년 10개월 동안 최루탄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44억 원으로 애초 예산 7억 원의 6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사용된 최루탄은 KM-25(사과탄) 11만 3,000발, SY-44탄 6만 6,000발, KP탄 3만 5,000발, 다연발탄 1,400세트 등 총 21만 6,000발로 1989년에 비해 30.5%나 증가했다(한겨레신문 1991/05/02). 최루탄 사용량이 증가한 것과 함께 45도 각도 조준원칙 등 장비사용규칙을 지키지 않고 시위대에 상해를 입히기 위해 직격 발사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sup>13)</sup> 광주의 ‘최루

안본부 발표 수치 등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경찰 발표 수치는 경찰 내부 통계, 외부 발표 수치, 언론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내부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이 수치를 통해 1987년을 전후로 한 경찰력 증강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 13) 치안본부는 이한열 열사 사건 이후 45도 이상의 각도에서만 최루탄이 발사되는 안전장치를 발사기인 윈체스터 소총에 설치해 직격발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의 진압전경들은 시위가 한창인 상황에서는 발사기를 순간적으로 앞으로 내리면서 쏘는 경

탄부상자협의회'가 전남대병원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한해 광주지역에서만 154명의 시민·학생들이 최루탄에 부상당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이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1991년 4월 19일 경남대생 정진태 씨가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두개골이 함몰됐고, 원광대생 유철근 씨도 두개골이 골절됐다. 20일에는 전남대 본관에서 시위를 벌이던 최강일 씨도 같은 이유로 왼쪽 눈을 실명했다(한겨레신문 1991/05/03).

다섯째, 일선 현장에 적용되는 진압 전술도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진압의 목표는 '해산 방식'에서 '공격 방식'으로 바뀌어 시위대는 신속하게 제압할 '대상'이 되었다. 진압경찰은 기존의 주동자 체포-시위대 해산-재집결 방지 등 3단계 진압전술 목표를 '시위자 전원 검거'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① '선무방송'을 통해 정복진압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위력을 과시하고, ② SY-44 최루탄 등을 집중 사격하여 시위대를 흩뜨려 놓은 다음, ③ 다연발탄 등을 일제히 쏘면서 사복체포조(백골단)가 일거에 시위대를 향해 뛰어드는 전면적인 작전이 시행되었다.

실제로 1991년 3월 19일 치안본부가 전국 일선 경찰로 하달한 '시위진압술 및 장비개선방안'에 따르면 중대·소대 단위로 횡대대형을 지어 '일보 전진·일보후퇴'를 반복하던 진압전술에서 후퇴 개념을 없애고 '전진공격'만이 강조되었다. 또한 시위자에 대한 신체 가격 방식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공격동작을 추가했으며, 진압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위에

---

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한겨레신문 1991/05/03).

서 아래로 신체 대부분의 부위에 무차별 가격할 수 있도록 한 신형 봉술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길이 50cm·70cm짜리 두 가지 뿐이었던 기존의 개인용 진압봉 이외에 110cm짜리 대형 죽도를 새로 만들어 사복체포조의 경우 각 소대 2개 분대에 지급했다. 1990년대 초 시위 진압 전경 부대가 평소부터 다량 보유하고, 시위 진압 때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쇠파이프도 1991년 들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연행술에 있어서도 종전의 '소매잡기' 방식을 버리고 '손목끼기', '양팔잡기', '양어깨누르기' 등 신체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시위대를 붙잡게 하고 있다. 방패술에도 '밀면서 쳐' 등 공격적인 동작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통 정복중대가 두 손으로 들게 되는 구형 대형 방패 외에 한손으로만 들고 시위대에 근접, 격투를 벌일 수 있도록 제작된 사복체포조용의 소형 타원형 방패가 지급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91/04/30).

### 3)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적개심 고조

이러한 시위 진압 경찰력의 강화 및 공격적인 시위 진압 전술의 도입과 함께, 거리의 시위현장에서는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적개심이 고조되었다. 시위대에 대한 적개심과 폭력은 개별 진압경찰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하중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이는 1987년 이래 급증한 시위 발생 현장에서 과중한 근무 강도와 유무형의 폭력에 노출됨에 따라 진압 경찰의 스트레스가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기동대는 진압 작전뿐만 아니라 소속 지방경찰청의 민생치안업무에도 차출되

었는데, 이는 당시부터 '치안 설거지'라 표현될 만큼 일상적인 것이었다(경향신문 1990/06/27). 실제로 1987년 이후 시위 진압 사태는 그 이전에 비해 3~5배<sup>14)</sup> 가량 많이 발생한 데 비해, 경찰력의 증강이나 처우 개선은 그에 비례하여 개선되지 않았다.

진압 작전에 동원되는 전·의경 및 경찰기동대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가 고조된 상황에서 분노와 적개심의 화살은 거리의 시위대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 진압경찰들이 시위대를 향해 내뿜는 적개심과 분노는 전장터의 적군에게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 규정은 무의미한 것들이 되고 말았다. 방어용 장비인 방패를 변형하여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거나, 시위대에서 날아온 돌맹이를 다시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은 시위 현장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다시피 했다. 각목·쇠파이프 등 규정 외의 사제 무기를 진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드는 전쟁터와 같은 시위 현장에서 젊은 전경들은 공포와 흥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돌변했다. 안전진압 수칙을 지키

14) <표 3> 진압사태 발생 추이 및 중요 경비경찰력 동원 횟수(연인원)

연도	1982	1983	1984	1985	1986
진압사태 발생	69	143	1,548	2,463	2,201
중요 경비 동원	14,140 (3,106,025)	16,459 (4,367,073)	15,609 (4,173,897)	13,708 (5,142,598)	16,052 (6,326,153)
연도	1987	1988	1989	1990	1991
진압사태 발생	12,957	6,921	7,056	9,660	6,491
중요 경비 동원	18,265 (6,987,878)	16,227 (7,122,332)	19,068 (5,926,587)	23,670 (3,261,469)	21,133 (2,622,4232)

(경찰통계연보, 1993, 260, 267)

라고 아무리 지시해도 일선의 전·의경 및 기동대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경찰 간부들의 고충이었다(조선일보 1991/06/10). 여기에 시위를 빨리 진압하라는 상부의 독촉까지 더해질 경우, 작전은 폭력을 조장하는 과잉 진압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위대에 대한 진압경찰의 적대감은, 경찰 내부의 폭력적 위계질서로 인해 발생한 측면도 있었다. 당시 전·의경부대 내에 만연한 폭력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집단 탈영과 같은 단체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경향신문 1990/06/02; 동아일보 1991/01/05).

무엇보다도 이 시기 경찰의 시위 현장 대응의 측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존재는 사복체포조, 일명 ‘백골단’이었다. ‘백골단’은 1985년 8월 1일 서울 시장 명의로 모집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 무술 유단자와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일반 전투경찰들과 달리 흰색 헬멧·청색 자켓·단봉·방패 등을 착용하고, 시위대에 난입하여 시위 대오를 흩트려 놓고 주동자를 연행하는 방식의 작전을 수행했다(시사저널 1991/05). 1991년 현재 서울시경에서 시위 진압에 나서고 있는 기동대와 전경대는 63개 중대 7,5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복체포조 ‘백골단’은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사복 중대’로 불리는 10개 중대와 나머지 중대에서 1개 소대 30여 명씩으로 구성돼 있었다(한겨레신문 1991/04/26). 사복체포조의 비율은 1989년 이후 크게 늘어나 시위 현장에서 정복경찰보다 사복체포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으며, 거리 시위에선 사복체포조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1991/04/30). 강경대 열사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역시 사복체포조였으며, 구타에 직접

가담한 이들은 상경 3명과 일경 2명 등 군 입대 후 전환 복무를 통해 전투 경찰이 된 젊은이들이었다(경향신문 1991/04/29; 최성혁 1991, 17). 이들은 1980~199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독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경찰은 대규모 도심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수단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었다. 도심 시위를 주도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도심 시위 전술과 시위 도구들이 이전에 비해 고도화된 것 역시 사실이었지만, 집회를 관리하는 경비경찰의 제도적·물리적 확대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대표되는 정권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는 일선의 시위 진압경찰에게는 거리에서의 폭력을 용인하는 신호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수년 동안 지속된 거리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고조된 경찰의 시위대에 대한 적대심이 ‘백골단’이라는 용인된 폭력 수단과 결합함으로써 1991년 5월의 비극이 배태되었던 것이다.

#### 4. 1991년 ‘5월 투쟁’과 경찰 진압 작전의 양상

##### 1) 1991년 5월 도심 시위의 전개

이 장에서는 1991년 ‘5월 투쟁’ 당시 생산된 자료를 통해 당시 거리에서



일어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충돌과 경찰 진압 작전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5월 투쟁'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명지대생 강경대 군 치사사건이 발생한 4월 26일부터 투쟁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6월 29일까지 대략 60여 일에 걸친 공안정국의 와중에 전개되었다.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2,361회의 집회가 열렸고, 제6공화국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들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학생, 빈민, 노동자 등 11명이 분신했고,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 위원장의 의문사와 성균관대 김귀정의 강경진압에 의한 질식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사망했다(김정환 2002, 46). 1991년 5월투쟁은 명지대생 강경대 군 치사사건이 대중적 공분을 획득하면서, 이를 계기로 노태우 정권 집권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표출된 공안통치적 폭압과 각종 비리와 실정 - 수서비리사건과 페놀사건, 민자당 당권 다툼 등 - 그리고 물가 폭등과 주택문제 등 민생파탄의 지속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반독재민주화투쟁과 결합되어 표출된 사건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464).

1991년 5월투쟁의 특징은 연이은 희생·분신에 따른 장의 행위가 대중 시위와 결합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1987년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한국현대사에서 죽음이 갖는 대중 동원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 것이었다. 5월투쟁을 이끈 지도부는 물론 언론에서도 1991년 5월을 1987년 6월과 유비(類比)했다. '제2의 6월 항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1987년 이래의 혁명적 열기가 대중을 거리에 나서게 했다. 1991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대규모 반정부 가두시위가 전국적 차원에서 계속되었다.<sup>15)</sup>

〈표 5〉 1991년 월별 시위 발생 현황

구분 월별	총계		학내		시가지		노사분규		기타·민원성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회수	인원
합계	8,229	2,837,500	4,189	1,461,700	1,317	479,700	234	175,100	2,489	721,000
1	291	35,200	72	11,300	44	2,900	20	5,400	155	15,600
2	268	60,200	121	16,900	29	2,400	15	29,000	103	11,900
3	617	187,800	439	152,600	37	2,500	17	8,400	124	24,300
4	1,190	423,500	858	355,300	158	28,700	14	4,500	160	35,000
5	2,640	1,171,100	1,152	466,500	837	369,600	71	26,900	544	308,100
6	464	234,000	253	94,600	50	40,300	48	46,000	113	53,100
7	480	118,700	261	64,600	16	1,300	16	19,000	187	33,800
8	425	140,100	199	71,900	47	16,700	5	19,600	174	31,900
9	572	133,500	294	79,200	43	5,300	8	11,100	227	37,900
10	423	122,300	212	60,000	12	2,300	2	1,700	197	58,300
11	564	150,700	273	79,400	39	7,100	6	500	246	63,700
12	331	60,400	55	9,400	5	600	12	3,000	259	47,400

자료: 경찰통계연보(1993, 270, 271).

1991년 5월투쟁을 전후한 시기 시위의 양상은 장례식이나 노제 등의 형태를 띠는 합법적 공개시위와 도심·부도심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수행되는 반합법적 투쟁으로 구분되었다. 이 시기 서울에서 벌어진 가장 큰 가두시위는 강경대 열사의 시청 앞 노제가 열리는 5월 15일에 열렸다. 강경대 열사와 당시 분신·투신으로 희생된 6인에 대한 노제 개최를 둘러

15) 〈표 4〉 1991년 주요 시위 발생일 및 참가 인원

날짜	4/29	5/1	5/4	5/9	5/14	5/18	5/25	6/8
인원	5만	10만	20만	50만	50만	40만	17만	3만

자료: 김정환(1998, 50).

싸고 이를 봉쇄하려는 경찰 측과 학생·재야·시민 등 장례행렬 사이에 큰 충돌이 빚어졌다. 가장 격렬한 싸움의 현장은 신촌로터리였다. 10만 명의 인파가 신촌로터리에 결집했으나, 집중 투입된 경찰의 물리력과 바리케이드에 막혀 3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장례행렬은 다시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연세대로 운구차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조선일보 1991/05/15; 한겨레신문 1991/05/15).

1991년 5월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의 흐름은 1987년 이래 창출된 도심 집회의 양상에 따라왔다. 이는 첫째, 시청-종로-청계천-광고-명동을 잇는 흐름, 둘째, 명동-을지로-종로5·6가-동대문-명동을 잇는 흐름, 셋째, 서울역-회현-명동-충무로를 잇는 흐름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로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다수의 시위 대열이 가장 빈번하게 선택했던 경로였을 따름이며 통일되거나 정형화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시위대의 흐름은 항상 가변적이었다. 이 시기 시위의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명동으로 집결했다는 것이다. 명동성당은 1980년대 이래 시위 과정에서 저항운동 진영이 공간적으로 확보한 도심지 가두시위의 교두보였다. 명동성당은 도심지 대중투쟁의 집결지이자 발산점이었으며, 시내의 주요 도로가 완전히 봉쇄되어 수세에 몰린 위기 상황에서 시위대가 찾을 수 있는 도심지의 마지막 퇴로이자 피신처였다.(김백영 2003, 372, 374)

1991년 당시 도심의 집회 및 가두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1991년 서울특별시경찰국에서 생산한 “5.25 종합대책”과 진압 현장의 경찰이 작성한 “상황일지” 등을 통해 그 전반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문건

이 생산된 배경이었던 5월 25일은 ‘공안통치·민생파탄·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제3차 범국민대회’가 개최된 날이었다. 이 집회는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sup>16)</sup>가 주최한 것이었다. 대책회의는 5월 상순의 대중적 열기를 동력으로 삼아 발족한, 보다 확대 개편된 형태의 재야 연대기구였다. 대책회의 측은 5월 18일 이후 지도부의 거점을 연세대에서 명동성당으로 옮겨 투쟁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상시적인 대 시민 선전활동에 나섰다. 새로운 거점에 자리 잡은 대책회의가 주도한 첫 번째 대규모 집회가 25일의 3차 범국민대회였다.

경찰은 5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열린 5차례의 집회가 모두 10~50만 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대중 참여 속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가두시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의 차단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5.25 종합대책”은 5.25 집회가 고 강경대 사망 사건에 대한 열기 저하로 5.18 집회보다 규모가 작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시위 양상은 그에 못지않게 ‘극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sup>17)</sup> 또한 원래 집회가 예정되었던 대학로가 봉쇄되었을 경우 시위대가 종로3가-종각-광교-명동권, 종로2가-청계2가-을지로2가-명동권으로 이동하여 명동성당의 지도부와 합류하여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외에 안국동·동십자로터리·내자동로터리·삼청동·효자동 등 청와대 인근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명동 신세계 백화점 및 회현동,

16) 이는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 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의 후신으로서 5월 16일 명칭을 바꾼 것이다.

17) “5.25 종합대책”, 3쪽.

을지로 입구·2가, 광고·청계2가 등지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가 발생한 도로변의 경찰관서나 미국 관련 시설(문화원·대사관·관저)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기습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예측했다.<sup>18)</sup>

서울 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의 발발과 진압 양상은 경찰과 시위대 양측 모두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이날 김귀정 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한극장 일대 역시 1980년대 중반 이래 시위대가 (부)도심 지역 시위 장소로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택지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경비대책에서 대한극장 앞 퇴계로와 충무로는 빠져 있었다. 이날 기습 시위의 장소로 대한극장 앞이 선택된 것은 대회를 기획한 지도부가 정찰활동을 통해 경찰의 경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한 이 지역을 기습시위 장소로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습적인 가두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의 정보대책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5·25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 운용된 정보추적 감시조는 지하철 추적조 47개조 99명, 고층빌딩 등 옥상 감시조 16개소 32명, 도심 주요 교차로 거점 배치 인원 12개소 36명이었다.<sup>19)</sup> 실제로

18) “5.25 종합대책”, 3~4쪽.

19) “5·25 종합대책”, 6쪽. 이 중 도심 주요 교차로 거점에 배치된 감시조는 분실 및 지역요원이라고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대공분실 등의 직원들이 도심에서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하는 시위가 발생할 만한 거점에 미리 배치되어 주변 병력의 투입 등을 신속하게 지휘하려는 경찰 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심 가두시위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경비대책에서 ‘내곽에서 외곽으로 밀어내기식 진압’, ‘폭력시위자(화염병, 돌, 각목) 전원 검거’ 등 진압 방식을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sup>20)</sup> 이는 1989년 이래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화염병에 대한 집중 단속, 검거 위주의 진압 작전 등으로 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대학로의 예정된 행사장 주변과 지도부가 위치한 명동성당 외에 ‘특정 지역’과 ‘도심 가두’ 지역을 집중적으로 경비하고자 했다. ‘특정 지역’은 광화문-종로1가-조계사-안국로터리-한국일보-연합통신3거리-청진파출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청와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주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당시 불교계와 정권의 긴장감으로 인해 경찰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sup>21)</sup> 경찰은 불교계와의 마찰을 우려하여 ‘조계사 행사 참석자는 마찰 없이 유연성 있게 대처’하라고 하면서도, 3차 범국

---

20) “5.25 종합대책”, 7쪽.

21) 1991년 5월 들어 가장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18일 저녁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에서 제등행사를 개최한 날이었는데, 이 날 경찰은 시위대가 합류했다는 이유로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불교계의 행렬에 최루탄을 난사하며 진압 작전을 시도하여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불교계는 5월 21일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정부인사·기관원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이고, 공식 식순에서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축사와 서울시장의 헌등 순서가 빠지게 되었다. 불교계는 의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기명 연등도 거부했다. 5월 24일에는 ‘제등행렬경찰폭력사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및 신도 100여 명이 조계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5일에는 조계사에서 ‘불교 탄압 규탄 및 폭력 정권 퇴진 범불교도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며, 대회 이후에는 시청까지 행진이 예고되어 있었다(한겨레신문 1991/05/21; 조선일보 1991/05/24; 한겨레신문 1991/05/25).

민대회의 시위대가 이곳 특정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절대 방어’하기 위해 3중 차단선 및 타격대를 운용하는 등 경비에 만전을 기했다.<sup>22)</sup> ‘도심가투’ 지역은 주로 시청권역으로서 이 시기 도심 시위가 빈발하는 지역을 가늠케 해준다. 이 지역은 시청광장·대한일보 앞·남대문·광고 로터리·을지로 입구·한국은행 앞·서울역 앞·미도파(현 명동 롯데영플라자) 골목·두산빌딩(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뒤·북창동 골목 등이었다. 이를 통해 강경대·이한열 열사의 영결식·노제의 기억이 깃들여 있는 시청 앞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경찰이 얼마나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도 역시 퇴계로는 주요 경비망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 문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변수방지’라는 명칭이 붙은 진압수칙이었다. 여기에는 규정 외 진압장구(쇠파이프, 각목, 화염병, 돌 등) 사용 금지, 폭력 행사 금지(폭언, 폭행, 가혹 행위), 검문검색 시 인격 보호(여학생 검문 시 핸드백 검색 금지, 가급적 언행 삼가), 화학탄 사용 수칙(발사 각도 45도 유지,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필요 최소량 사용), 언론인과 마찰 금지 등이 명기되어 있다.<sup>23)</sup> 이는 1991년 5월 당시 경찰 측이 과잉 진압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한편, 이 매뉴얼과 실제 진압 현장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장 일선의 정보경찰이 작성한 상황일지에는 해산보다 검거 위주의 진압

22) “5.25 종합대책”, 13쪽.

23) “5.25 종합대책”, 16~17쪽.

작전을 무전으로 지시받았음을 명시한 내용이 곳곳에 나타난다.<sup>24)</sup>

## 2)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과 김귀정 열사의 사망

“5.25 종합대책”이 보여주듯, 김귀정 열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퇴계로 일대는 대학로의 예정된 대회장, 조계사 및 안국동의 ‘특정 지역’, 시위 빈 발지역으로 주요 경비망이 갖춰진 ‘도심 가두’ 지역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 발생한 5월 25일의 시위는 그 발생 초기에 경찰의 경비망을 피해 일시에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 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 이 시위에는 주로 각 대학에서 ‘출정식’을 마치고 삼삼오오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결한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오후 1시에 열린 출정식을 마친 학생들은 오후 3시경 일제히 삼선교 로터리, 신촌 로터리, 을지로 4가, 신당동, 신림동, 돈암 로터리 등에서 100~2500명 규모의 기습시위를 벌였다.<sup>25)</sup> 학생들은 오후 5시에 스카라극장(현 아시아미디어타워)·극동빌딩(현 남산스퀘어빌딩)·대한극장 등 퇴계로 일대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는 ‘택’을 전달받고 이 일대에 집결했던 것이다.<sup>26)</sup> 경찰은 오후 4시 40분 경 시위대가 외곽에서

---

24) 일선 정보경찰들이 실시간으로 작성한 상황일지는 무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경우가 많았다. 시위(예정) 현장에서 사복을 입은 채 동향을 살피던 정보경찰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시위대 측에 새어 나가지 않도록 ‘음어(陰語)’를 사용했다. 삼구=검거, 사십=집회, 박쥐=진압 등이 그것으로 ‘해산위주보다는 삼구위주 작전’ 따위의 용법이었다. 점=사람(시위대수), 수거=연행, 양떼=시위대, 노루=도망 등의 음어에서는 진압경찰이 시위대를 바라보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25) 성복서 경비과 “상황일지”.



시위를 벌인 뒤 지도부가 있는 명동성당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 경찰병력을 시내 삼일고가차도로 집결시켰다.<sup>26)</sup> 시위대가 선택한 시내 진입 경로는 퇴계로-명동 코스였다. 삼삼오오 집결한 시위대는 극동빌딩, 스카라극장, 대한극장 일대에서 일시에 도로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투척하며 시내로 진입하고자 했다.

시위는 오후 5시에 시작되었다. 충무로역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해 온 시위대와 퇴계로 4가 쪽에서 집결한 시위대가 대한극장, 스카라극장, 필동로터리 앞 도로를 점거했다. 시위대는 삼시간에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구호와 합성을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인근에 집결하고 있던 경찰 병력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작전을 시도하자, 시위대는 미리 준비해 온 화염병을 던지고 보도블록 조각을 집어 던지며 저항했다. 퇴계로와 충무로 곳곳에서 공방전이 벌어졌다.

퇴계로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크게 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충무로(명보로터리, 스카라극장) 쪽에서 필동로터리 쪽으로 진격하면서 시위대의 허리를 끊는 서울시경 제4기동대장이 지휘하는 5개 중대였다. 여기에는 강경대 열사를 타살한 94사복체포조가 이름을 바꾼 99사복체포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퇴계로 4가 쪽에서 대한극장 쪽으로 들어오는 송파서장 지휘의 5개 중대였다. 이 방면의 경찰 진압 대열에는 ‘개스차’(일명 페퍼포그) 2대가 동원되어 시위대를 급격하게 몰아붙일 수 있었

26) “OOO 진술조서”, 서울지방검찰청, 1991/05/26

27) 성북서 경비과 “상황일지”

<그림 1> 1991년 5월 25일 김귀정 열사의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경이 제출한 현장약도



\* 자료: 고김귀정열사폭력살인진상조사단, 『고 김귀정 열사 폭력살인 진상보고서』, 1991.6.1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사료등록번호 00536849)

다. 세 번째는 명동 쪽에서 필동로터리 쪽으로 전진하는 성북서 경비과장 지휘 하의 5개 중대였다. 이 방면의 진압 경찰 역시 ‘깨스차’ 2대를 앞세우며 시위대를 빠르게 압박해 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진압 경찰에도 사복 체포조와 무술중대가 포함되어 있었다.<sup>28)</sup> 세 방면의 진압경찰은 각각 원남 로터리(서울시경 제4기동대), 종로 4가(송파서장), 북창동 골목(성북 경비과장)

의 경비를 담당하던 중이었는데, 도심 시위 상황에 따라 경력 재배치 과정에서 퇴계로 진압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sup>29)</sup>

그러나 최루탄 발포와 백골단의 난입으로 시위대는 곧 흩어졌다. 다연 발로 최루탄(일명 지랄탄)을 난사하며 돌진하는 '깨스차'의 최루탄 연기에 시위대는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대로변 골목들 사이사이로 흩어지는 시위대들 틈으로 백골단이 난입하며 공격적인 진압 작전을 펼치는 것은 이 시기 진압의 흔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 날의 진압 양상은 좀 달랐다. 서울시경 제4기동대장이 지휘하는 사복96중대와 송파서장이 지휘하는 사복99중대가 대한극장에서 필동로터리 방향 인근의 흩어진 시위대 열 속으로 난입하여 일부 시위대를 포위하여 마치 '토끼몰이'하듯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퇴계로 옆 대림정 골목으로 도망가는 시위대를 포위한 채 몇 분 동안 이들을 구타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좁은 골목을 향해 피신하던 시위대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하나의 더미를 이루게 되었다. 백골단은 시위대가 무더기로 깔려 있는 것을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에게 곤봉과 발길질 세례를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김귀정 열사는 최루탄 연기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수십 명 아래 깔린 채 압사하게 된 것이다. 시위대가 퇴계로 차로를 접거한 지 30여 분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퇴계로의 여러 골목으로 빠져나간 시위대는 곳곳에서 화염병과 돌맹이를 던지며 경찰들과 대치했

28) “고 김귀정 열사 진상조사단 1차 보고서”, 1991/06/01, 1면.

29) “5.25 종합대책”, 10,14쪽.

으나, 이러한 산발적인 시위 역시 오후 6시 30분 무렵이 되면 거의 진압되었다.

이상과 같은 5월 25일 시위의 양상을 통해 볼 때, 1980년대 하반기에서 1990년대 도심 시위 진압 작전의 몇 가지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우선, 사복체포조(백골단)의 무분별한 폭력에 대한 제동장치가 없었다. 1987년 당시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초래한 최루탄이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다면, 1991년에는 강경대·김귀정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백골단의 무자비한 폭력이 경찰 과잉 진압의 대명사가 되었다. 강경대 열사 사망사건 이후 경찰의 대책에서는 ‘안전 진압’이 명기되며 규정 외 진압장구 사용 금지와 최루탄 발사 각도를 규정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수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화염병과 돌이 날아드는 현장에 투입된 진압 경찰들은 안전 진압 수칙이 있더라도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시위대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인 폭력으로 드러냈다(조선일보 1991/06/10).

다음으로, 현대화된 시위 진압 장비로 인해 경찰의 진압 작전은 매우 단시간 내에 완수될 수 있었다. 그 핵심은 ‘깨스차’와 물대포 등 대형 진압장비였다. ‘깨스차’는 1969년 삼선개헌 반대운동 당시에 처음 등장한 이래, 1990년대까지 대규모 집회·시위를 초동에 해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현대식 진압장비는 1987년 이후 숭한 희생이 치러졌음에도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었다. 치안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강경대 열사 사망일인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은 모두 10만여 발로 이는 1990년 한 해 동안 사용된 25만여 발의 40%에 해당되는 양이었다(한겨레신문 1991/05/25). 이

러한 진압 장비의 현대화로 가두시위가 매우 빠르게 진압되면서 운동 진영 내에서 시위 방식 전환을 둘러싼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국은 1987년 이후 거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도심 시위를 거치며 현대식 진압 장비를 도입하여 신속히 시위 군중을 해산시키고, 시민의 대규모 운집을 막으려 했다. 또한 여러 비극적 사건을 거치면서 최루탄 등 진압 장비의 오용과 일선 경찰의 폭력을 막기 위해 진압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시위 진압이 이루어지는 거리의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수칙은 그야말로 매뉴얼 속의 활자에 불과했다. 경찰은 여전히 정권의 강력한 방조 아래 도심 시위의 신속한 ‘공격형 진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 현장의 경찰들은 전장과 같은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거리낌 없는 폭력을 자행했다. 1991년 5월 당시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은 이러한 경향이 누적되어 발생한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 5. 맺음말

이 글은 학생운동 세력과 진압경찰이라는 두 주체를 중심에 두고 1980년대 이래 서울에서 벌어진 도심 시위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도심 공간은 군사정권의 강력한 권위가 관철되는 ‘지배의 공간’이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가두시위는 권력이 강제하는 금기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도시의 공간질서는 물론 일시적으로 지배질서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적 행위’로 간주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운동이 급속도로 고양되면서 조직화·대중화된 동원체계에 의해 기획되는 가두시위가 빈발했다. 이 시기 시위는 대학 캠퍼스 내외, 노동자 밀집 지역 혹은 서민 주거지역 등 이전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주요 권력기관이나 상징적인 건물에 대한 타격 및 점거 투쟁도 늘어났다. 1987년의 경험은 대규모 집회를 상시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대중조직 건설로 이어졌다. 이 중 학생운동 세력은 가두시위에 특화된 ‘전투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1987년 이래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빈발하자 정권은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한 진압 방침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가두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대공·정보경찰과 경비경찰이 제도적으로 확충되었으며,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진압경찰력이 대폭 증가했고 진압 장비도 현대화되었다. 시위 현장에서는 사용되는 최루탄 발사량이 폭증하고,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편법적으로 자행되는 최루탄 직격 발사도 지속되었다. 시위 진압 경력(警力) 운용도 공격적으로 변했으며, 1985년 경 등장한 사복체포조, 일명 ‘백골단’은 시위 현장의 무법자로 군림했다.

대규모 시위의 빈발과 시위 대오의 조직화·무장화에 따른 경찰의 진압 장비 확충 및 진압 전술의 공격적 운용은 1991년 ‘5월 투쟁’의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91년 5월 민주화운동 진영의 도심 시위는 1987년 이래 대중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민주화 진전을 열망하고 공권력에 희생된 젊은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결합하여 폭발적인 형

태로 전개되었다. 반면 1991년 5월 내내 수십만 명의 인파가 도심 일대를 장악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시위 진압 전술을 펼쳤다. 현대식 진압장비와 ‘백골단’으로 무장한 데다 공격적인 진압 교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경찰은 국가폭력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1991년 강경대·김귀정 열사 등 청년들의 희생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청년·학생들의 죽음으로 인해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적 공분이 고조되고, 정치적·사회경제적 불만이 거리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경찰의 총책임자인 안응모 내무부 장관을 경질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과 6월 대책회의 등 간부 검거 선포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김지하·박홍 등의 사회운동 세력 비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계란 투척사건으로 ‘5월 투쟁’은 고립되어 갔다. 야당과 사회운동 주류세력의 지도부는 ‘선거를 통한 심판’을 주장하면서 거리의 투쟁에서 떨어져 나가 6월 광역의원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거리의 투쟁과 멀어져 갔고, 결국 6월 12일 고 김귀정 열사의 장례식이 끝나자 ‘5월 투쟁’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김정한 2004, 170, 171; 김정한 2020, 37).<sup>30)</sup>

30) 그럼에도 1991년 ‘5월 투쟁’이 남긴 것이 사회운동 진영의 패배만은 아닐 것이다. 1991년 5월 이후에도 상당 기간 대학 캠퍼스 내의 주류적 분위기는 1980~1990년대 대중적 학생운동이 창출한 저항 문화가 압도했다. ‘5월 투쟁의 자식들’은 저항 문화로 가득 찬 대학 생활을 통해 사회적 성공이나 안락과 같은 유혹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함께 청년 시기를 보냈다(손우정 2021, 45). 이들로 대표되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세대는 이후 1990년대 진보 세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며 진보정당운동과 급진운동의 골간을 이루게 된다.

1991년 5월 거리에서 벌어진 학생운동 세력과 경찰의 상호작용을 통해 두 주체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은 ‘5월 투쟁’을 단지 ‘잊힌 역사’나 ‘실패한 투쟁’, 혹은 ‘상처’나 ‘패배’로 기억하는 기존의 관점에 새로운 시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과정은 사회운동 내부의 분열이나 남성 중심적 운동문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 내재적 관점(김원, 2004)이나, 노태우 정권의 언론 조작과 이데올로기 공세가 먹혀들어 간 사례로 파악하는 외재적 관점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요소들을 드러내 준다.

‘5월 투쟁’은 학생운동 세력에 의해 수행된 도심 시위와 경찰 진압 작전 사이의 길항과 상호작용 속에서 전개된 일련의 사건이 중첩된 하나의 국면이었다. 1987년부터 1991년을 하나의 국면으로 본다면 이 국면의 가장 중요한 시공간은 다름 아닌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이었으며, 도심 시위의 가장 중요한 두 주체는 학생운동 세력과 진압 경찰이었다.

학생운동 세력은 6월 항쟁 이래 거리에서 벌어진 무수한 시위 속에서 도심 시위의 다종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운동 세력은 선거 유세장으로 떠나버린 야당과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5월 투쟁’을 ‘치사-분신 정국’으로 몰고 간 정권에 의해 대중적으로 고립되어 갔다. 한편, 학생운동 세력과 길항관계에 있었던 진압 경찰은 1987년 거리에서 맞본 패배감을 만회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적·물리적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경찰은 노태우 정권 시기 공안정국에서 물리적 억압 기구로서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갔으며, 그 핵심적인 역할은 고조된 가두투쟁을 신속·강력하게 진압하는 것이었다.

학생운동 세력과 진압경찰 사이의 전면적인 충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1987년 이후 기성 제도정치권에 인입된 야당과 사회운동 주류 세력은 거리에서 발생한 시위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했고, 노태우 정권의 권력 핵심부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는 한편 도심 시위의 강경 진압을 촉구할 따름이었다. 1991년 ‘5월 투쟁’의 거리에서 발생한 폭력은 고립된 학생운동 세력과 팽창하는 진압 경찰 사이에 어떠한 제동장치도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한계를 짚어보고, 추후 1991년 ‘5월 투쟁’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 것으로 줄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글은 도심 시위를 소재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 시공간적 범위를 1991년의 서울 시내라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으로밖에 설정하지 못했다. 이는 지면의 한계일 뿐만 아니라, 현재 1991년 투쟁의 전국적 양상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다만, ‘5월 투쟁’ 30주년을 기념하여, 당대 학생운동 경험자들의 구술·증언·연구성과들이 추가로 다수 제출되고 있고, 지역적 차원에서도 1991년 거리의 상황을 정리하려는 시도가 태동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1991년 열사 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 2021; 김봉국 2021; 김상숙 2021). 향후 새로운 ‘5월 투쟁’ 연구는 기존의 당사자성을 지닌 저자들에 의해 수행된 사회운동사적 관점의 연구를 토대로 삼되, 보다 넓은 견지에서 당대 권력기구와 지배집단의 구체적인 통치 양상을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는 데 이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김민준~~

## 참고문헌

### <연구성과>

-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 엮음. 2021. 『1991년 열사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밥북.
-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편.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2005. 『고려대학교 학생운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 권혁은. 2020. “1960년대 미 대한경찰원조의 전개: 경찰 ‘현대화’와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수행”. 『사림』 74. 수선사학회.
- \_\_\_\_\_. 2021. “5.18 항쟁기 시위 진압의 기원”. 『역사문제연구』 45. 역사문제연구소.
- 김백영. 2003. “가두정치의 공간학: 1980년대 서울시내 대학생 가두시위에 대한 공간적 분석”.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사회이론과 사회변혁』. 한울엠플러스.
- \_\_\_\_\_. 2013.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1950~6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과 광장정치”. 『서강인문논총』 38. 인문과학연구소.
- 김봉국. 2021. “로컬에서 1991년 5월투쟁을 다시보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1991년 열사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밥북.
- 김상숙. 2021. “1988~1991년 대구·경북지역 민주화운동과 1991년 5월 투쟁”. 『1991년 열사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밥북.
- 김소진. 2020. “미국의 대한 경찰원조 변화와 한국경찰의 치안업무 재편(1953~1967)”. 고려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원. 2004. “대중운동과 민주화: 91년 5월 투쟁과 68년 5월 혁명”. 전재호·김원·김정한.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_\_\_\_\_. 2011.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매진.
- 김정한. 1998.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이후.
- \_\_\_\_\_. 2002. “권력은 주체를 슬프게 한다: 91년 5월투쟁 읽기”.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편.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 \_\_\_\_\_. 2004. “대중운동과 민주화: 91년 5월 투쟁과 68년 5월 혁명”, 전재호·김원·김정한.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_\_\_\_\_. 2020. 『비혁명의 시대: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빨간소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3.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국가인권위  
 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역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손우정. 2021. “토론1: 5월 투쟁의 자식들과 좌절된 것들의 연대”.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 『자료집』 1991년 열사투쟁과 한국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동호. 2013. “197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과 방식”. 정근식·이호룡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이창언. 2013. “NI(민족해방)계열 학생운동의 주류화와 한계”. 정근식·이호룡 편. 『학생운동  
 의 시대』. 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991. 『전대협』. 돌베개.  
 전재호·김원·김정한. 2004.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지훈. 1989.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최성혁. 1991. 『눈물로 쓴 보고서』. 도서출판 이웃.  
 허남오. 2011.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  
 허은. 2013.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정근식·이호  
 룡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신문·잡지 기사〉

경향신문. 1990/06/02. “전경 백여명 기물부수고 난동”. 15면  
 \_\_\_\_\_. 1990/06/27. “의무경찰 치안설거지 등 “긋은일”로 사기저하”. 10면.  
 \_\_\_\_\_. 1991/04/29. “전경 추가구속 1명”. 1면  
 동아일보. 1991/01/05. “20살 전경 억울한 죽음, 고참에 맞아 숨쳐 … 유족들 분노”. 17면.  
 시사저널. 1991/05. “시대가 만든 ‘폭력꾼’ 백골단”. 80호.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418>  
 조선일보. 1991/05/08. “서울-광주 신민당 대학생 점거 농성”. 1면.  
 \_\_\_\_\_. 1991/05/15. “시청노제로 또 긴장”. 1면.

- \_\_\_\_\_. 1991/05/24. “경찰수뇌 파면 요구 승려 등 백여명 농성”. 23면.
- \_\_\_\_\_. 1991/06/10. “경찰의 「무리수」”. 2면.
- 한겨레신문. 1990/01/17. “시위진압 ‘공격형’ 전환”. 10면.
- \_\_\_\_\_. 1990/05/31. “최루탄 너무 쏜다”. 11면.
- \_\_\_\_\_. 1990/10/18. “경찰, 시위와 사실상 전쟁 선언”. 15면.
- \_\_\_\_\_. 1991/02/20. “파출소등 화염병 습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15면.
- \_\_\_\_\_. 1991/04/26.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 2: 시위현장의 무법자 ‘백골단’”. 3면.
- \_\_\_\_\_. 1991/04/30.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 3: ‘공격형 진압’ 시위대 ‘적’으로 간주”. 3면.
- \_\_\_\_\_. 1991/05/02.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 4: 갈수록 살벌한 시위진압 장비”. 3면.
- \_\_\_\_\_. 1991/05/03.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 5: 최루탄 부상 지난해 수천명 달해”. 3면.
- \_\_\_\_\_. 1991/05/15. “강경대씨 장례 못치러”. 1면.
- \_\_\_\_\_. 1991/05/21. “정부규탄에 종파초월 한목소리”. 4면.
- \_\_\_\_\_. 1991/05/25. “강경대씨 타살이후 24일동안 최루탄 10만발 발사”. 14면.
- \_\_\_\_\_. 1991/5/25. “불교계 오늘 도심행진”. 15면.

<자료>

- 경찰사편찬위원회. 1995. 『경찰50년사』.
- 경찰청. 1992. 『경찰통계연보』(제35호, 1991)
- 고김귀정열사폭력살인진상조사단. 1991/06/11. 『고 김귀정 열사 폭력살인 진상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사료등록번호 00536849)
- 국가법령정보센터. 1989/07/07.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04129,19890616\)](https://www.law.go.kr/법령/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04129,19890616))
- \_\_\_\_\_. 1991/04/23.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https://www.law.go.kr/법령/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13357,19910423\)](https://www.law.go.kr/법령/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13357,19910423))
-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8/11. “청년.학생운동 10월 동향 보고서”.
- 민차산. 1988. 『혁명전위의 전략과 전술』. 바람과 물결.
- 서울특별시경찰국. 1991/05. 『5.25 종합대책』.
- 성북경찰서 경비과. 1991/05. “상황일지”.

Abstract

## Student Movement Groups' Downtown Protest Tactics and the Police's Suppression Strategy

Focusing on the Struggle in May 1991

Lee, Jun-young

Sungkyunkwan University, Ph.D. Course

This paper seeks to historically reconstruct the downtown protest tactics of the expanded and organized student movement groups after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and the changes in the police's operations to suppress the protests with the focus on the Struggle in May 1991. Since the May 16 Coup, urban centers became 'spaces of domination' controlled by the military regime's violent authority. As such, the street protests led by university students in the 1980s were actions of defiance against the taboos enforced by political powers. These street protests became more frequent after the mid-1980s, expanding in spatial scope and becoming more radical and organized in substance.

As the protests grew in scale and became more organized and tactical in the late 1980s through the accumulated experience in holding demonstrations, especially the 1987 June Democratic Uprising, the state's response to demonstrations and protests also evolved. The government created a climate of fear, declared a war against crime, and announced a strong suppression plan against rallies and protests. To suppress the street protests, the government authorities reorganized its public security system and strengthened the frontline police forces. Accordingly, the police power against demonstrations was significantly reinforced with larger numbers of the anti-communist intelligence policemen and defense police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street protests equipped with modernized riot

gears.

As a result, the collision between protesters and the police continued to escalate, and the tragic "Struggle in May 1991" was its inevitable outcome. The police expanded their riot control equipment and engaged in aggressive suppression tactics in proportion to the growing frequency of large-scale demonstrations which became more organized and militarized over time. This cycle of escalation peaked in 1991. In this situation, coupled with the use of modern riot control equipment, the violent tactics deployed by the Baekgoldan (Special Riot Police Unit), and an aggressive riot control doctrine, the police had no choice but to become the incarnation of state violence.

■ **Keywords:** Student movement, the Struggle in May 1991, Kim Gui Jung  
(金貴井)

투고: 2021.9.30. 심사: 2021.10.14. 확정: 2021.11.1.